



데스크  
칼럼 \_

## 육계자조금, 개인 이익이 아니라 육계산업 발전을 위한 것

본지 김한웅 부장

**관리** 위원 및 감사위촉 건으로 난  
항을 거듭했던 육계자조금 대

의원회가 오는 11월 21일 안성에 있는 농협  
연수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육계자조금 공동준비위원회는 반드시 내년  
에는 육계의무자조금 사업을 출범시킨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번에 개최될 대의원총회는 지난해 12월  
23일 1차, 올해 4월 20일 2차에 이어 세 번  
째가 된다.

1회 총회는 정족수 부족여부로 유회(流會)  
됐으며, 2차 총회는 관리위원, 감사 위촉문  
제로 이견이 있어 유회되어 지금까지 표류돼  
왔다.

육계의무자조금 사업은 추진 초기부터 말  
도 많고 탈도 많은 사업으로 비춰지고 있다.

물론 육계산업 자체가 갖는 특수성으로 인  
해 야기되는 문제이지만 자조금 사업이 갖는  
기본적인 근간을 무시하려고 하는데서 그 원  
인을 찾아볼 수 있다.

초기 육계의무자조금 사업을 추진하면서  
세인들의 눈에 비춰진 모습은 축산단체간 이  
해관계에 따라 대립하는 양상이었다. 그러나  
계열화 사업의 진척이라는 업계가 갖는 특수  
성으로 인해 육계자조금 관련 축산단체는 신  
경전을 벌일 수밖에 없었다.

자조금 거출대상은 어디까지인지, 계열주체  
와 계약농가 중 누가 자조금을 내야 하는지,  
또 어떤 비율로 내야 하는지, 육용종계는 어

떻게 할 것이며, 종계 및 재래닭은 얼마를 거둘 것인지 등 선결해야 하는 과제가 산적해 있었으며 이를 효율적으로 조절해 나가야만 육계의 무자조금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를 토대로 육계사육농가와와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 자조금 사업이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에 대한 충분한 사전교육과 논의가 있어야 하나 사실상 이러한 부분이 조금은 소홀했다.

의무자조금 사업은 반드시 실행시켜야 한다.

매년 되풀이되는 AI의 폐해에서 벗어나고 닭고기의 소비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육계산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육계자조금 사업 시행만이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이다.

지난 4월 20일 경기 안성 농협연수원에서 개최됐던 2차 대의원 총회에서는 관리위원회 관리위원, 감사 위촉문제가 축산단체와 일부 대의원간의 의견대립으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막을 내렸고 그 이후 ‘육계자조금호’는 현재까지 표류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관리위원, 감사의 선정문제로 ‘육계자조금호’가 표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육계 계열화 사업체와 일부 육계사육농가들의 불신이 내재돼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물론 농가의 입장에서 보면 보다 많은 대우를 받자고 하는데 이를 마다할 이는 없을 것이다.

또한 육계자조금 대의원회를 계열주체와의 협상 채널로 이용하겠다는 것도 농가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안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육계자조금은 어느 특정 계열주체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 전체 육계산업의 발전을 위한 활로를 개척하자는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다.

자조금 대의원 총회장이 특정 주체에 대한 성토장으로 또는 개인의 불만을 터뜨리는 장소로 전락하며 육계자조금 사업 추진의 발목을 잡는다면 이는 육계산업 전체를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축산단체가 대의원들의 요구를 수용해주면 될 것 아니냐는 의견도 피력하고 있으나 축산단체는 축산자조활동자금을 설치 운용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농림부 장관으로부터 거출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지도·감독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결국 자조금사업에 대한 모든 것을 축산단체가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축산자조금은 축산업자가 거출한 돈만큼 정부가 지원을 하는 사업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 갈등을 빚었던 관계법의 이견도 관계기관의 유권적 해석으로 해소되었으니 아무쪼록 오는 21일 개최될 제3차 대의원총회에서는 육계산업이 한 걸음 더 진일보 할 수 있도록 좋은 성과를 기대해 본다. 